

범시민 『산업평화운동』 지지 결의안

의안 번호	157
----------	-----

제안년월일 : 2003. 12. 17.

제안자 : 황정호의원외 13인

1. 주 문

산업평화 없이 기업하기 좋은 목포를 만들 수 없고 투자유치도 어려워 잘사는 목포를 이룩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목포는 노사분규가 없는 시라는 확고한 인식이 정착되도록 시민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범시민 산업평화운동 전개를 적극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

2. 제안이유

가. 올해 미국-이라크 전쟁, 북한 핵문제 및 괴질 사스 등이 세계 경제를 강타하면서 국가 경제 역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비감소와 생산위축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중소기업체들이 부도의 위기에서 헤메이는 등 지역경제 역시 총체적인 불황에 직면해 있음.

나. 또한 지난 6월 11일부터 높이 40m의 대형 크레인에 올라가 129일째 단신 농성시위를 벌이던 한진중공업 김 주 익 노조위원장 자살에 이어, 10월 26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대회에서 이 지역 출신인 근로복지공단 목포지부 이 용 석 차장이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한 노사대립이 전망되고 있음.

다. 이에 목포시의회는 전라남도 시장·군수의 범도민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결의와 목포시에서 전개하고 있는 범시민 산업평화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함.

범시민 산업평화운동 지지 결의문

목포권 경제 살리기의 요체는 일자리와 소득의 창출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선 취약한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관광 목포권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유치가 그 성패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목포권은 불안정한 노사관계 이미지 때문에 많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하고 있으며, 목포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산업평화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온 시민의 염원이자 시대적 소명인 목포권 경제 살리기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산업평화 정착이 최우선 과제중의 하나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우리는 목포권 경제 살리기를 바라는 온 시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노·사·정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합심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2. 우리는 산업현장에서 노·사간에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3. 우리는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범시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근로자 사기진작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적극 앞장선다.

2003. 12. 18.

목 포 시 의 회 의 원 일 동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의 장 인

부 의 장 인

의 원 인

의 원 인

사무국장 인